

전력정책 합의회의의 경과와 합의

김병수¹⁾

1. 서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부지선정, 천성산 관통 터널 문제 등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매우 격렬한 양상을 띠면서 지속되고 있다. 사회갈등이 항상 부정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과학기술 갈등을 포함한 사회갈등에 대한 예방책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모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사전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제도들이 맥락에 맞게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사회갈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선불리 적용한다면 갈등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으며 시민참여 제도의 의의가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외면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정책을 정당화해주는 요식 행위로 끝나거나 과도한 기대로 인해 도입의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참여 제도의 정신과 도입 조건, 각 모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개최되었던 전력정책 합의회의의 개최 배경과 진행과정, 성과 등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국내에서 본격 실시될 각종 합의회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작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기획과 실무를 맡았던 입장에서 합의회의의 의의, 진행과정, 성과와 한계 등을 간략히 살펴 본 것이다

2. 합의회의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는 '선별된 일단의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으로 정의 할 수 있다. (Joss & Durant, 1995)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 모델은 1990년대 초 네덜란드와 영국에 도입된 것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552건이 개최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998년(유전자조작식품)과 1999년(생명복제)에 합의회의가 개최

1)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bskim@korea.ac.kr

2) 합의회의 개최국 및 주제는 <http://www.loka.org/pages/worldpanels.htm>를 참고할 것.

된 바 있다.³⁾

<표 1> 합의회의 기획 및 일정별 준비과정 (김두환, 2000)

1차 조정위원회	·기획 내용 검토, 조정위원 역할 정리, 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목록 작성, (시민패널 촉진자 선정), 자료집 준비 검토.
공 청 회	·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시민패널 모집	·해당 주제에 대한 합의회의 개최 사실과 시민패널 모집을 알리는 광고
2차 조정위원회	·전문가패널 후보 명단 작성 및 접촉, 시민패널 선정.
1차 예비모임	·시민패널 소개, (촉진자 소개), 기초 지식 제공, 주요 질문 선정, 전문가패널 구성에 대한 제안(시민패널).
3차 조정위원회	·주요 질문 검토, 주요 질문에 답변할 전문가 추천.
2차 예비모임	·주요 질문에 대한 토론, 세부 질문사항 정리, 추천된 전문가패널 구성 승인.

합의회의가 갖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사회 갈등이 빈번해 지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다 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논의 및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갈등예방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중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모델에는 합의회의를 비롯해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등이 있다. (이영희, 2004)

두 번째는 참여적 기술영향평가(PT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전적 형태의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판별해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John Durant, 1999; 이영희, 2000) 이 과정에는 주로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의회나 정부에 자문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도구적이고, 전문가 중심적이어서 과학기술문제를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 보는 최근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학습’을 유발시킨다.

세 번째는 대중의 과학이해를 증진시키는 보다 유용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대중의 과학이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무지한 대중에게 과학지식을 일방적으로 또는 알기 쉽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런 결핍모델에 기반한 과학대중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중의 과학이해에 과학과 일반인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동광 2005) 합의회의는 일반 시민들에게 특정 쟁점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와 다양한 전공과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과 토론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과학기술 쟁점에 대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덧붙

3) 1998년과 1999년 국내에서 개최 되었던 합의회의의 개요는 한재각(2000)을 참고할 것.

여 구체적 상황 속에서 대중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준다.

3. 전력정책 합의회의의 개최 배경

1990년 안면도, 94년의 굴업도 그리고 2003년의 부안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18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원자력 발전이 중단 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정부의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의 격렬한 저항의 1차적 원인은 결정 과정의 폐쇄성에 있다. 계획에서 부지선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철저히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부안의 저항이 심해지자 정부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결국 부안 주민들의 자체 투표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선정 찬반만을 묻는 주민투표 도입만으로는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데 있다. 오히려 선불리 접근할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폐기장 문제를 기술적 또는 지역만의 문제로 환원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잘못된 가정이 20여년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완공되어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총 1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고 현재 국내 총 전력생산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있다. 전체 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지만 지난 25년 동안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시민과학센터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합의회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정책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결론도 예측할 수 없는 합의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합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일반시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참여 제도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합의회의를 진행했다.

4. 진행 과정과 특징

<표 2> 전력정책 합의회의 행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 날짜: 준비 워크숍 - 6월 4일 (금) 1,2차 예비모임 - 7월 24일(토), 9월 4일(토) 본 행사 - 10월 8일(금) ~10월 11일(월) ◦ 장소: 참여연대 강당(예비모임), 국민대학교(본 행사) ◦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후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프레시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조정위원회 구성

합의회의의 '중립성'과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계, 환경단체, 언론인, 관련 공무원, 시민참여 전문가 등 총 8명을 조정위원을 선정했다. 조정위원들의 과거 합의회의에 비해 늘어난 것은 주제의 민감성을 반영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계,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결과의 반영과 학습을 위해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원자력 대중화 기관의 장도 포함되었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본 회의 전까지 세 번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합의회의 세부 주제, 본 회의 일시 및 장소, 시민패널 모집 계획 및 선정 등을 논의 했으며 시민패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모임 및 본 회의에서 발표할 전문가 패널 선정과 제공자료 목록 등을 검토하였다. 이번 조정위원들은 과거 두 번의 합의회의 때 활동 했던 조정위원들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각 사안마다 의견을 능동적으로 개진하는 등 회의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물론 이런 적극성으로 인해 가끔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정위원들의 평균연령이 과거 합의회의에 비해 낮은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그 보다는 유전자 조작 식품, 생명복제 합의회의 때와 달리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이 구체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조정위원 명단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승봉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용두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과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조홍섭	한겨레신문사 부장

2) 시민패널 모집

합의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패널들은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의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모집결과 전국에서 176명의 시민들이 패

널로 신청했는데 이는 1998년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의 40명, 1999년 생명복제 합의회의의 85명에 비하면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전력정책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 신문광고가 나가면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과거 생명공학을 주제로 한 합의회의에 비해 여성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모집 광고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시민패널의 선정은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서류심사에서는 연령, 직업, 성, 지역을 고려해 약 50명을 1차로 선발했다. 서류에서 통과된 시민들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인터뷰는 전화(지방 거주자)와 면접을 통해 진행했는데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 이번 행사를 알게 된 계기, 원자력에 대한 입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서류와 인터뷰 과정에서 전력계통 종사자, 환경단체 활동가 등 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했다. 전력정책의 미래를 논의할 시민패널 18명의 선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선정된 패널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층으로 퇴직교사, 주부, 학생, 회사원, 농업기술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시민들이었다. 합의회의 전 과정과 본 회의에 참석한 시민패널은 최종적으로 16명(남 9, 여7)이었다.

3) 시민패널 1,2차 예비모임

시민패널들은 7월 24일과 9월 20일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비공개로 가졌다. 1차 예비모임에서는 선정된 시민패널들 간의 소개가 이루어졌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합의회의의 구조와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시민패널들은 전력정책 쟁점과 원자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초 강의를 들었다. 기초 강의를 들은 후 주제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이때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 향후 전망, 각종 질문 등 시민패널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본 회의 때 전문가들에게 질문 할 질문지 초안을 작성했다. 시민패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제공되었는데, 모든 자료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균형 잡힌 문서들이었다.

2차 예비모임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현황,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기초 강의가 있었다. 강의를 끝난 후에는 1차 모임에서 논의된 질문들을 더욱 구체화 하고 정교화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패널들은 본 회의 때 참석할 전문가 패널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1,2차 예비모임에서 시민패널이 선정한 주요 질문은 △전력문제를 고려할 때의 중요한 가치기준 △전력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국내의 동향과 산업적 이해관계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 △원자력 발전의 대안 △전력정책 수립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등이었다.

4) 본 회의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3박 4일 일정의 본 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서 발표할 전문가들은 시민패널의 의견을 참고해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패널들은 첫날과 둘째 날 오전까지 11명의 전문가패널과 2명의 원전지역주민의 발표를 들었다. 발표는 세부 주제 별로 입장이 상이한 전문가가 각각 20분 정도 발표한 후 시민패널들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날 밤 시민패널들은 전문가 패널의 발표를 평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후에는 시민패널과 전문가 패널 전체가 단상에 나와 약

4시간 동안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일반인과 전문가들만의 토론은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형태로 합의회의 모델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과거 합의회의 때도 나타났던 문제로 일부 전문가 패널은 시민패널에게 자신의 주장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등 소통의 문제를 드러냈다.4)

시민패널들은 둘째 날 밤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이제까지 제공받은 다양한 정보와 각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함께 나누는 열띤 토론시간을 둘째 날 밤과 셋째 날 내내 가졌다. 주요 쟁점인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조별 토론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3/4 이상의 찬성이면 '합의'로 간주하기로 했고, 소수 의견도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끝나자 시민패널들은 조를 나눠 보고서 작성 작업을 밤을 꼬박 새우며 진행했고, 마지막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

5) 시민패널 보고서

시민패널들은 전력정책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치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친환경성과 평화 △공급안정성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뢰를 지적했다.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해 봤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본 회의 기간 동안 가장 논쟁 적인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였다. 시민패널들은 조별 또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표 3> 원자력 발전 지속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p>①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 (0표)</p> <p>②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축소. 단 수요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추가건설 허용 (4표)</p> <p>③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 중지 (12표)</p>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발전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민패널들은 현재와 같은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는 한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패널들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지역적 분산화와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표결 결과에서 유심히 봐야 할 점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가 아니라 현재의 정부 전력정책에 찬성한 패널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을 적극 찬성한 시민패널들조차도 현재의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4) '원전건설 중단' 합의까지 '시민 16인'의 3박4일 프레시안 2004.10.1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41013084138&s_menu=사회

5. 맺음말: 성과와 한계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갈등의 주요한 원인을 대중의 무지와 외부의 개입에서 찾고 있다.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시민들로 인해 또는 언론이나 운동단체 같은 외부 개입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꼬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홍보나 계몽의 대상이 되어 왔고, 관련 의사결정은 일부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몫이었다. 주민들이 폐기장을 핵폭탄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부안군수의 사례는 이런 관점을 잘 대변해 준다. 그러나 이번 합의회의의 진행 과정과 시민패널 보고서에는 이런 선입관이 잘 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회의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전력정책과 같은 어려운 과학기술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정부 연구소의 전력정책 전문가는 보고서의 방향은 못마땅하지만 내용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또한 상호토론과 숙의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현재의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기존의 단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의회의가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까지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합의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시민패널, 전문가패널 그리고 외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 정책결정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합의회의에 대한 시민패널들의 인식변화나 과학지식에 대한 이해 증가를 인터뷰나 각종 기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자력, 환경단체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도 학습효과를 발견 할 수 있었고, 지면에 열거 하기는 힘들지만 상당수 정책 결정 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었다. 따라서 당장을 아니더라도 이번 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더 나아가 앞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아래서 시행될 각종 합의회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합의회의의 가장 큰 한계는 원자력 중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촉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후원 언론사인 '한겨레'와 '프레시안'을 제외하고는 비중 있게 다룬 매체가 거의 없었다. 합의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자가 파악한 가장 큰 원인은 기자들이 합의회의라는 모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은 대충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회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행될 합의회의의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보다는 해당 정책을 직접 관장하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언론의 보도 또한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명진·이영희 (2002) 『합의회의』.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엮음.

한울.

한재각 (2000) 『1998 1999년 한국합의회의 준비 진행』 "과학기술과시민참여: 합의회의 국내도입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이영희 (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

김두환 (2000)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협력적 계획모형의 적용: 합의회의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김동광 (2005) 「시민참여와 대중의 과학이해- 일반시민은 과학에 대해 '무지'한가?」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강좌 자료집』, 시민과학센터

김선혜(2004) 「시민의 눈으로 본 원자력 발전」, "녹색평론 79호", 녹색평론사

Joss, S. & J. Durant, eds.(1995).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the Role of Consensus Conferences in Europe*. London: Science Museum.

John Durant (1999)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and the democratic model of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26, No. 5, pp. 313-319.